



#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방안

2025. 11. 20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방안  
**CONTENTS**



- PART 0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PART 02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검토
- PART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PART 04 국내외 사례 검토
- PART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PART 06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 방안

# 0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추진배경

대내외적 복합위기 대응 위해  
서울시 규제개혁 필요성 확대

여러 영역정부 수준에 걸친 복잡한 규제애로 증가  
협력 필요한 민관 주체 다변화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체계적 진단 및 대응전략 마련 미비



## 연구 목적과 내용

“효과적인 서울시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의 강화방안을 제시”

### ① 이론적 검토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제도,  
분석 기준, 지방규제  
특징 등 문헌검토



### ②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분석

서울시 규제개혁 제도 분석  
- 자치법규, 규제개혁 제도 운영 실태, 조직 등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 조사



### ③ 국내외 사례 검토

타 광역 지자체, 외국의  
규제개혁 거버넌스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④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서울시 규제철폐100일’ 사례  
‘대한민국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 사례  
규제혁신포럼 개최 통한 성과 공유 및 토론



### ⑤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방안 도출

# 02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검토



## 규제개혁 거버넌스 개념

### ■ 규제 거버넌스와 규제개혁 거버넌스

- **규제 거버넌스:** “입법기관에 의한 규제권한의 위임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기관 감독과정,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규제를 입안, 집행, 단속하는 규제기관의 역량, 그리고 시민사회와 피규제집단, 그리고 입법기관 간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제도”(이종한 외, 2009: 25)
- **규제개혁 거버넌스**
  - “주요 행위자(네트워크) 간 **다양하고 상호 의존적 관계** 하에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만드는 것**”(최대용·이혁우, 2014: 120)
  - 규제개혁 거버넌스는 **규제개혁 추진체계**(구조: 제도, 관리)와 그 **운영과정**(지지의 근원, 투명성, 전문성) 요소로 구성됨(이민창, 2017: 279)



이 연구는 기존 규제를 개혁하는 것과 관련된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므로 **규제개혁 거버넌스**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서울시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규제개혁 과정에서 관련 행위자간 상호활동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함

# 02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검토



##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분석기준

- 규제개혁 거버넌스 실태 파악 및 개선 필요성 판단을 위한 **분석 기준 마련 필요**
  - 규제개혁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으로 인해 널리 합의된 분석 기준은 부재한 상황
  -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를 고려하여 **김신 · 이혁우(2016)의 분석 기준 활용**

— [표 1] 기존 규제개혁 추진체계 분석 기준(김신 · 이혁우, 2016) —

분석 기준	질문	구체적 내용
정치적 조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규제의 개혁을 위한 정치적 조정력을 갖추기에 적합한 체계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료의 행정적, 절차적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해관계 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li> </ul>
기존 규제 개혁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기구가 실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그런 권한을 행사할 실질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기구의 권한이나 체계가 국가 전체의 법체계와 정부조직체계, 의사결정 단계와 부합하는지 여부</li> </ul>
기존 규제 개혁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규제의 개혁에 있어서 어떤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효율과 낭비 초래 여부</li> </ul>
규제개혁을 위한 자원의 충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규제 개혁 기구가 규제개혁을 위한 자원을 충분히 갖추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규제 개혁을 위한 전략 마련, 규제합리성 분석, 이해당사자 조정 및 설득, 규제개혁 홍보와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전문지식 동원, 유능한 인적자원, 예산 등</li> </ul>

# 02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검토



## 지방규제개혁의 특징

### ■ 지방규제 유형에 따른 다층적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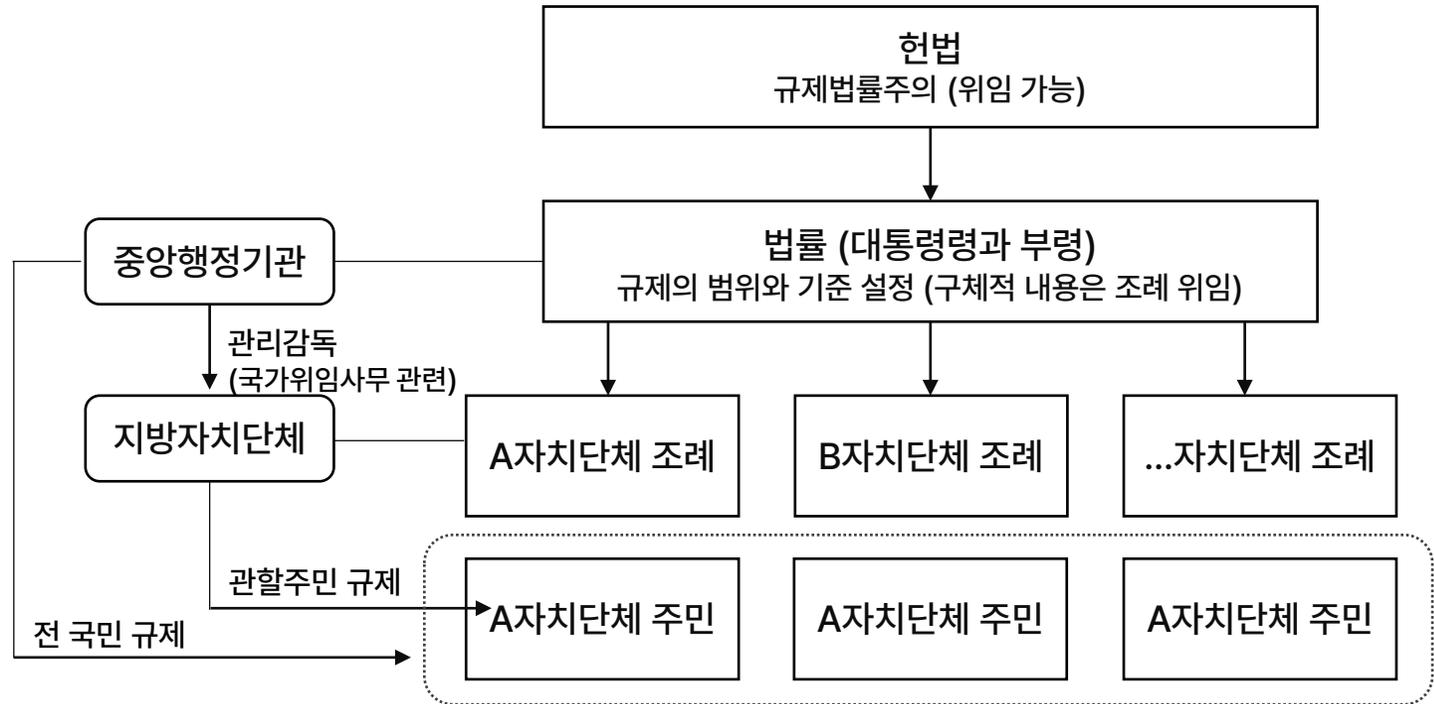
#### ● 지방규제개혁의 대상

- ① 지방정부가 가진 **자체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자체규제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규제와 자치사무에 관한 규제가 있음

- ② **중앙규제** 중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

- 지방규제는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어 (김건위·이병기, 2019),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규제 유형에 따라 다층적인 접근 필요

— [그림 1] 지방규제의 중층적 구조 (김건위·이병기, 2019: 40) —



# 02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검토



## 지방규제개혁의 절차



### 규제 발굴



### 규제 검토



### 규제 해소



### 규제 개선·환류

#### 중양규제

지자체가개선  
건의하는  
중양규제

- ➔ (지자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공무원 발굴, 자체 접수창구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행안부·국조실 제출 또는 지자체 규제신문고 담당관이 건의
- ➔ (일반국민) 대국민 공모전, 규제신문고 직접 건의 등

- ➔ (행안부) 지자체 제출 과제 중 소관 부처 협의과제 선별
- ➔ (규제 소관 부처) 지자체 규제신문고 접수된 건의 수용 여부 검토 후 답변
- ➔ (전문연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 심층 분석(지방 개선건의 분석서 검토)

- ➔ (행안부) 규제소관 부처 협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 ➔ (국조실) 규제소관 부처에 기존규제 존치 필요성 소명 요청 및 정비 권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 (지자체) 규제 소관 부처 협의

- ➔ (행안부) 우수사례 평가시상, 우수사례집 발간, 지자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특고세 인센티브), 규개위·비상경제 장관회의 성과보고
-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 ➔ (지자체) 우수 사례집 발간 (예: 경기, 강원)

#### 자체규제

지자체  
소관규제

- ➔ (지자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공무원 발굴, 자체 접수 창구 등을 통한 발굴
- ➔ (중소기업 ombudsman) 지방규제 전수조사, 간담회, 규제애로 신고센터 통한 발굴
- ➔ (일반국민) 대국민 공모전, 지자체 접수 창구 통한 건의

- ➔ (지자체) 규제 총괄 부서 및 규제 소관 사업부서 검토

- ➔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자체 심의기구(예: 서울시 전문가규제심사단)

- ➔ (지자체) 우수 사례집 발간



# 02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검토



## 지방규제개혁 거버넌스 실태

-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추진단계에서 행안부는 전 단계에 참여하는 반면, 지자체는 발굴과 해소 단계에서 제한적 역할
- 시도연구원, 전문가의 참여는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

— [표 2]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추진 단계별 거버넌스 현황 —

구분	규제발굴	규제검토	규제해소	규제개선·환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과제 심의·조정</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규제 공모전</li> <li>• 규제발굴 다각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협의과제 선별</li> <li>• 핵심과제 선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li> <li>• 토론회 개최</li> <li>• 규제개혁위원회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진대회</li> <li>• 우수사례 발굴</li> <li>• 성과평가</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발굴 주관</li> <li>• 반기별 규제발굴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협의</li> <li>• 현장 협의</li> </ul>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협의</li> <li>• 현장 협의</li> </ul>	
전문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된 규제개선과제 심층분석</li> </ul>		
시도연구원				
전문가				
일반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개선 과제 제안</li> </ul>			

자료: 전대욱 외(2024: 46)의 내용 정리

# 02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검토



##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계별 문제와 거버넌스 강화 방안

- 기존 연구는 지방규제개혁 추진 시 **규제발굴·검토·해소** 단계에 걸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시도연구원 간 **시·도 거버넌스**, 기업체 및 전문가 등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강조

[표 3]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계별 문제점과 거버넌스 강화방안

구분	규제발굴	규제검토	규제해소	규제개선·환류
추진단계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 채널의 <b>다양성 부족</b></li> <li>➤ 지방규제혁신 웹사이트 내 <b>정보 제공 미흡</b> 및 신고 채널 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가 규제 소관 부처 협의과제 선별 및 핵심과제 선정 시 <b>기준 부재</b></li> <li>➤ 규제검토의 <b>전문성 부족</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을 위한 체계적 <b>법령 부재</b></li> <li>• 규제 해소 관련 업무 추진 근거가 미흡하여 행안부가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 시 주도적 협의 진행에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등 규제 개선 <b>사후관리</b> 과정 미비</li> <li>➤ 개선 과제의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b>규제영향분석</b> 과정 미비</li> </ul>
거버넌스 강화방안	<b>중앙규제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시도연구원,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한 규제 발굴</li> <li>• 기업체 및 전문가 등의 협업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시도연구원-전문연구기관 등과 협업 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연구원-전문연구기관 간 협업 통한 규제해소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위, 지방규제혁신위, 중앙행정기관, 주민 간 협업 통한 규제 개선의 이행관리 필요</li> </ul>
	<b>자체규제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b>) 지자체-시도연구원의 시·도 거버넌스, 기업체 및 전문가 등의 민관 거버넌스, 국민 참여</li> <li>• 규제개혁위원회,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주민 등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li> </ul>			

자료: 전대욱 외(2024: 32-35; 57-59; 64-65)의 내용 정리

# 02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검토



## 소결

### 지방규제개혁 거버넌스의 복잡성

-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주체와 방식이 매우 다양화
- 개선대상 규제 소관 기관(중앙, 광역, 기초), 규제개혁의 추진단계(발굴, 검토, 개선, 환류), 활용할 수 있는 규제 관리 도구(위원회, 부처협의 등)에 따라 구축·운영해야 할 거버넌스(참여주체, 협력방식 등)도 달라짐

### 지방주도성 수준에 관한 재고 필요

- 기존 연구는 특히 중앙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규제개혁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 관련 **법령 보완** 등을 통한 **규제 소관 부처의 수용률** 제고 필요성 강조
- 그러나 개선 건의 안전에 대한 부처 수용률이 **30%** 수준에 그치고, **지방은 건의**하고 **중앙은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지방규제개혁 추진체계 하에서 지방주도성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시점

← [표 4]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추진 실적 →

연도	발굴 건수	협의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불수용 건수	불수용률
2019	1,981	1,127	435	38.6%	692	61.4%
2020	2,309	1,270	386	30.4%	884	69.6%
2021	2,445	1,170	317	27.1%	853	72.9%
2022	2,409	888	276	31.1%	612	68.9%
합계	9,144	4,455	1,414	31.7%	3,041	68.3%

자료: 행안부(2023) 내부자료를 전대욱 외(2024: 39)에서 정리



## 시사점

### 다양한 거버넌스 실험 필요

다종다양한 지방규제개혁 안전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시범적 거버넌스 운용·분석** 통해 시사점 도출 및 다층적 거버넌스의 적응적 운용방안 모색 필요

### 지방의 전환적 역할 모색

규제환경 변화는 신속하고 유연하며 더 참여적인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필요성 시사, **지방의 적극적 역할** 주문

중앙규제 개선 건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더불어, 보다 **분권적**이고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방안 모색 필요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개혁 제도 및 정책

### • 최근 서울시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강화 및 규제총괄조직 확대

#### | 기존 |

구분	제도 및 정책
자치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li> <li>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18개 조항(목적, 정의, 기본원칙,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총괄관 관련)</li> <li>- 시행규칙: 16개 조항(규제정비 종합계획, 위원회, 규제등록 및 입증 책임, 의견 수렴, 공표, 정비 등)</li> </ul> </li> </ul>
조직 및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법무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7명(팀장 1명, 주무관 6명)</li> <li>①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관리</li> <li>② 행안부 규제개혁 과제 발굴·관리(네거티브규제)</li> <li>③ 시·구 등록규제 정비업무</li> <li>④ 종합계획수립</li> <li>⑤ 중앙규제 관련 업무(행안부 협업 규제개혁 과제 발굴·관리(정기건의, 테마규제 등), 중기부 옴부즈만(기업, 민생) 규제 애로 발굴)</li> <li>⑥ 자치규제 관련 업무(규개위 운영, 자치법규 규제심사 및 규제등록, 규제입증요청 관련 업무, 자체규제 개선사례 발굴)</li> <li>⑦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li> <li>⑧ 국가입법 의견조회 및 제출의견 등록, 불합리규제신고센터 등 온라인 신고사항 처리, 규제 신속확인, 중앙부처 질의·회신 관리</li> </ul> </li> </ul>



#### | 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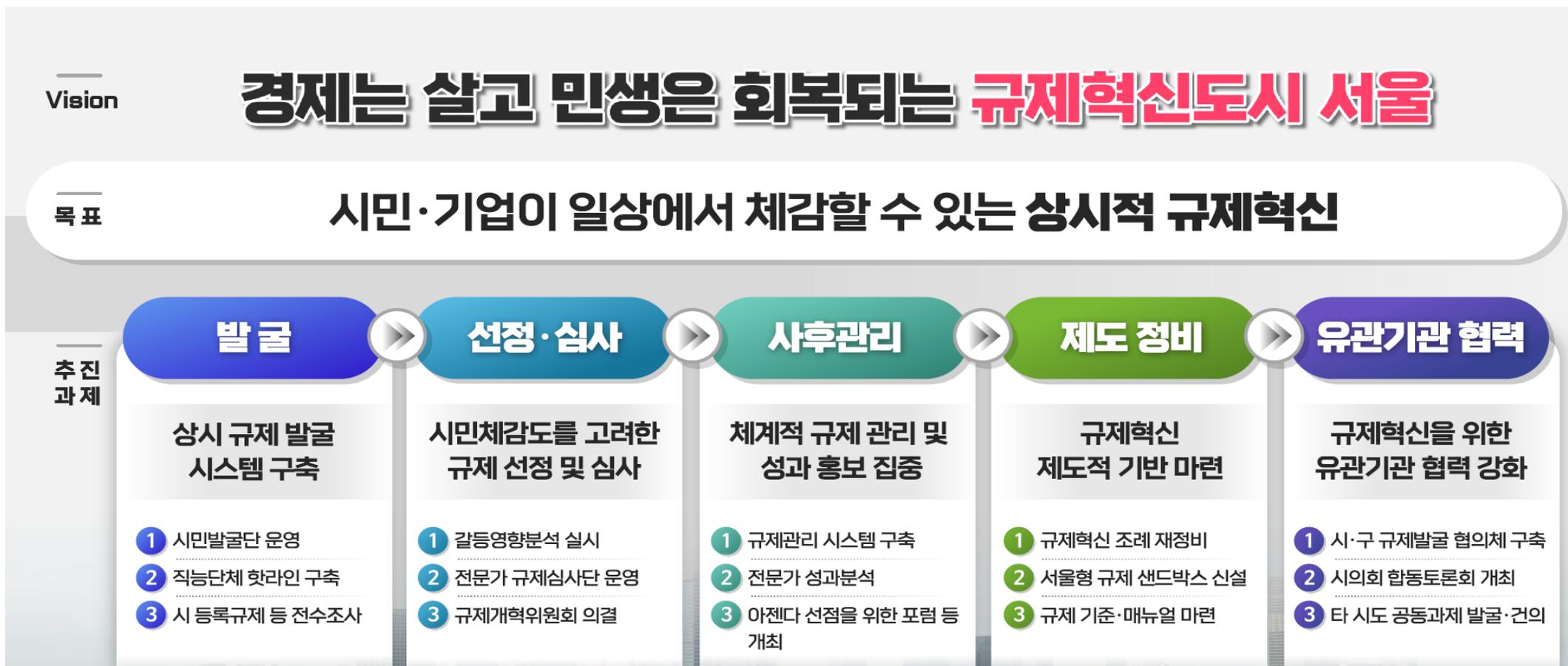
구분	제도 및 정책
자치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규제혁신 기본조례로 개정 추진 (* 시의회에 의안 접수(10/18) 및 소관위원회 회부(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① 시민 일상과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범주의 규제 완화, ② 시민·기업·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 ③ 신규 규제혁신 제도 법적 근거 마련</li> </ul> </li> <li>구성: 조례 6장 28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변경 내용: 시장의 규제혁신 책무 및 규제 범주 명확화, 의견수렴 조항 신설, 규제정비 요청 조항 신설,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설치 근거 신설,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근거 신설, 공무원 책임 및 동기 부여 관련 조항 신설</li> </ul> </li> </ul>
조직 및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 (* 전국 지자체 중 최초 3급 국장급 규제 총괄 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33명(기획관 1명, 담당관 2명, 팀장 6명, 주무관 24명 등)</li> </ul> </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b>[창의규제담당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사례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li> <li>창의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li> <li>창의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li> <li>창의행정상 운영</li> <li>법령·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정책 수립</li> <li>규제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li> <li>자치법규 규제사전심사에 관한 사항</li> <li>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규제총괄관의 규제개혁지문·조정·대외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li> <li>등록규제 관리 및 자체규제 정비</li> <li>규제개선 우수사례 전파 및 교육</li> <li>규제개선 과제 점검 및 평가·성과관리</li> <li>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 홍보에 관한 사항</li> </ol> </div> <div style="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b>[규제개선담당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기업규제·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li> <li>규제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li> <li>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대상 안건 발굴 및 검토</li> <li>규제개혁 관련 시민제안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 및 관리</li> <li>시·자치구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li> <li>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div> </div>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 서울시는 2025년 8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하여 상시적인 규제개혁 추진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개혁 추진단계별 거버넌스 실태

[표 5] 서울시 규제개혁 추진단계별 거버넌스 현황(규제 소관 주체별)

구분	규제발굴		규제검토		규제해소		규제개선 · 환류							
중앙행정 기관 소관 규제개선	<p><b>[규제 소관 주체가 직접 발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자치구, 시 공공기관 자체 발굴</li> <li>시·구 규제발굴 협의체</li> </ul> <p><b>[행안부, 중소기업음부즈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간담회, 합동토론회, 공모전 등 통한 발굴</li> </ul> <p><b>[시민이 건의·발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개혁신문고 (→ 규제소관기관)</li> <li>'상상대로 서울' (→ 시)</li> <li>다산120 콜센터, 응답소 (→ 시)</li> </ul>	<p><b>[시도 공동발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단위 공동과제(예정)</li> </ul>	<p><b>[서울시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가 발굴·접수된 과제의 개선 필요성 검토</li> </ul> <p><b>[시의회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의회 창구인 규제없소에 접수된 안건의 개선 필요성 검토</li> </ul>	<p><b>[규제소관기관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선건의된 과제 자체 검토</li> </ul> <p><b>[행안부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과제 검토 및 부처 협의 과제 선별</li> </ul> <p><b>[국조실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신문고 통해 접수되었으나 합리적 건의임에도 소관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 선별</li> </ul>	<p><b>[서울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규개위</li> <li>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li> <li>안건별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성 (예정)</li> <li>갈등영향분석 통한 갈등조정 (예정)</li> <li>핵심과제 규제영향 분석 통한 개선 논리 보완 (예정)</li> </ul> <p><b>[시·시의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시의회 합동 토론회</li> </ul>	<p><b>[시·시의회 직능단체 시도협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체·창구 통해 대정부 개선건의</li> </ul>	<p><b>[서울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스마트서울부) 통한 규제 철폐 현황 공개</li> <li>온라인 플랫폼 구축 (예정)</li> </ul>							
서울시 소관 규제개선	<p><b>[기업·단체가 건의·발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시)</li> <li>SBA기업지원센터 (→센터→시)</li> <li>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단체 →규제 소관기관)</li> </ul>	<p><b>[중앙발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음부즈만 지자체 등록규제조사</li> <li>공정위 경쟁제한적 조례발굴 연구용역</li> </ul>	<p><b>[서울연구원 재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안건 중 재논의 필요한 안건에 대한 재검토 (외부 민간 전문가 자문)</li> </ul>	<p><b>[자치구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가 발굴·접수하여 송부한 자치구 소관 규제의 개선 필요성 검토</li> </ul>			<p><b>[전문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 분석</li> </ul>							
서울시 자치구 소관 규제개선							<p><b>[시·시의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시의회 합동 토론회</li> </ul>	<p><b>[시·시의회 직능단체 시도협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체·창구 통해 대정부 개선건의</li> </ul>	<p><b>[시·시의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시의회 합동 토론회</li> </ul>	<p><b>[시·시의회 직능단체 시도협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체·창구 통해 대정부 개선건의</li> </ul>	<p><b>[시·시의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시의회 합동 토론회</li> </ul>	<p><b>[시·시의회 직능단체 시도협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체·창구 통해 대정부 개선건의</li> </ul>	<p><b>[시·시의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시의회 합동 토론회</li> </ul>	<p><b>[시·시의회 직능단체 시도협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체·창구 통해 대정부 개선건의</li> </ul>
서울시 공공기관 규제개선	<p><b>[서울연구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선과제 발굴 연구용역 (비상시)</li> </ul>			<p><b>[시 공공기관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가 발굴·접수하여 송부한 공공기관 소관 규제의 개선 필요성 검토</li> </ul>			<p><b>[시·시의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시의회 합동 토론회</li> </ul>	<p><b>[시·시의회 직능단체 시도협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체·창구 통해 대정부 개선건의</li> </ul>	<p><b>[시·시의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시의회 합동 토론회</li> </ul>	<p><b>[시·시의회 직능단체 시도협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체·창구 통해 대정부 개선건의</li> </ul>	<p><b>[시·시의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시의회 합동 토론회</li> </ul>	<p><b>[시·시의회 직능단체 시도협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체·창구 통해 대정부 개선건의</li> </ul>	<p><b>[시·시의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시의회 합동 토론회</li> </ul>	<p><b>[시·시의회 직능단체 시도협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체·창구 통해 대정부 개선건의</li> </ul>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개혁 추진단계별 거버넌스 실태

— [표 6] 서울시 규제개혁 추진 단계별 거버넌스 현황(참여 주체별) —

구분	규제발굴	규제검토	규제해소	규제개선·환류
규개위, 지방규제혁신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개선과제 심의조정</li> </ul>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당규제 공모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요청 대상 과제 선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신문고 접수 안건 관련 규제존치 필요성 입증 요청(→소관 부처)</li> <li>개선 관련 협의</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생규제 공모전</li> <li>규제발굴 다각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협의과제 선별</li> <li>핵심과제 선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li> <li>토론회 개최</li> <li>규제개혁위원회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진대회</li> <li>우수사례 발굴</li> <li>성과평가</li> </ul>
규제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가 건의한 과제의 개선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 협의, 현장협의</li> </ul>	
시 규제개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규개위 의결</li> </ul>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발굴 주관</li> <li>규제발굴 다각화 추진</li> <li>반기별 대정부 규제발굴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발굴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규개위, 전문가 자문심사단 운영</li> <li>부처 협의, 현장협의 참여</li> <li>갈등영향분석,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li> <li>서울시-시의회 합동토론회(예정)</li> <li>다양한 대정부 건의 창구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성과보고회 주관</li> <li>시, 구, 공공기관 직원 우수사례발표회</li> <li>규제철폐 성과 온라인 공개, DB관리</li> </ul>
자치구, 시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 공동발굴,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굴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선 관련 협의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성과보고회 참여</li> </ul>
시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발굴(규제없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시의회 합동토론회(예정)</li> <li>대정부 건의 관련 국회 협력(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규제개혁 업무성과 보고(시의회 소관 상임위, 규제개혁특별위 등)</li> </ul>
서울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용역 통한 발굴과제 도출(비상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자체선별 과정에서 누락된 안건의 재검토(자문심사단 상정 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과적 정부 건의 위한 핵심과제 영향분석 논리 보완 지원 연구(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규제개선 성과분석 지원(예정)</li> </ul>
피규제자(기업,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접수 창구 활용 개선 과제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참여</li> <li>대정부 건의 협력(직능단체, 협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성과보고회 참여</li> </ul>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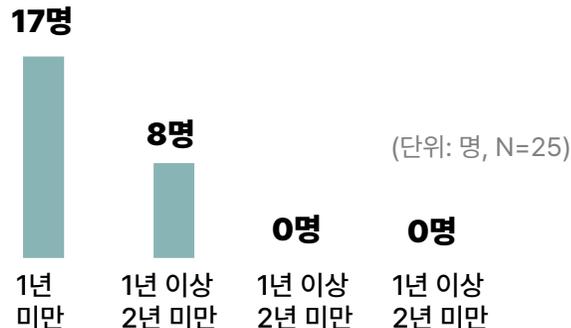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_1) 자치구 규제 담당 공무원

- 자치구 규제담당 인력 부족하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 자치구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앙정부 및 서울시 소관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에 가장 어려움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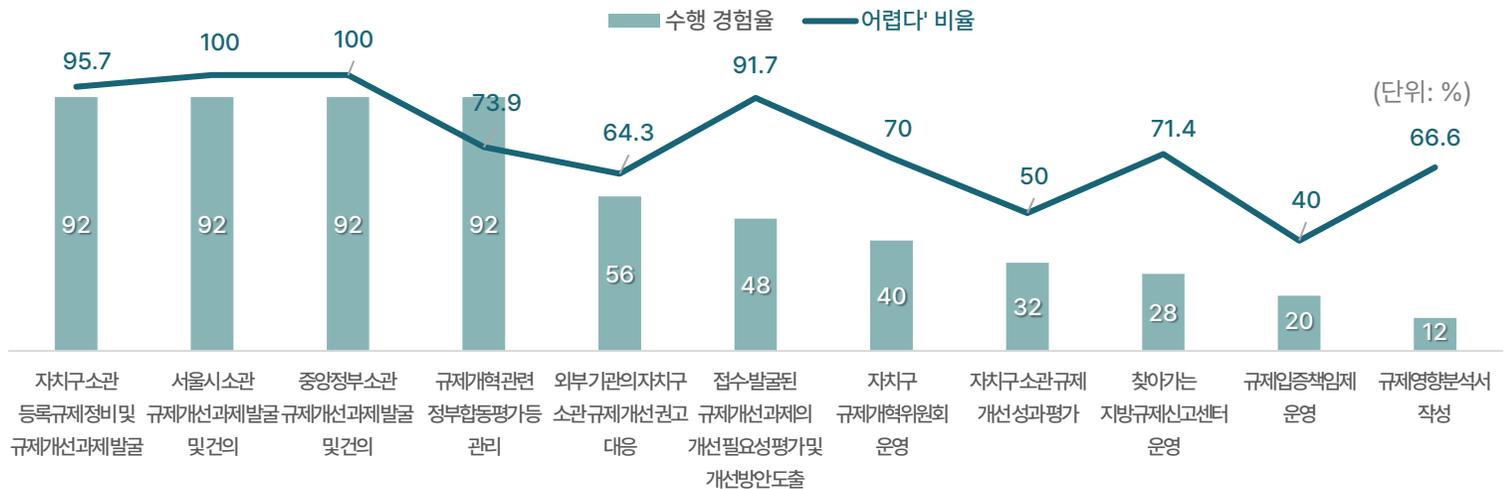
### 자치구 규제업무 담당 인력

- 자치구 규제업무 담당 인력은 평균 **1.4명**
- 응답자 전원(25명)이 **다른 업무와 규제 업무 병행**
- 규제개혁 업무의 비중은 전체 업무의 **21.2%**
- 규제개혁 업무 담당 기간은 모두 **2년 미만**임



### 규제개혁 업무 수행 경험과 업무별 난이도

- 구 공무원은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와 규제개혁 관련 **정부합동평가** 등 관리를 가장 많이 수행
- 가장 어려운 업무는 **'중앙정부 소관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서울시 소관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1) 자치구 규제 담당 공무원

- 상위정부 소관 규제 발굴 어려운 이유로 낮은 수용률로 인한 동기 저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유인책 부족 지적됨
- 대부분 법령 관련 사항이나 일반 민원으로 자치구 소관 규제 발굴 자체 어렵고 사업부서 협조도 부족



### 규제개혁 관련 업무가 어려운 이유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소관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 ➔ “불필요한 규제를 건의해도 중앙정부의 수용률이 낮아서 거의 미수용으로 건의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음”
- ➔ “실무부서 건의를 위한 유인책이 전무함”
- ➔ “중앙부처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해 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하위 행정기관에 업무 가중만 되고 있음. (기초에서는) 소관 업무를 담당 1명이 주업무와 병행하며 하는 수준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자치구 소관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 ➔ “자치구 차원의 규제보다 상위법령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많음”
-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제 업무 비중이 매우 낮음”
- ➔ “(개선과제를) 받아보면, 대부분이 일반 민원에 속함”
- ➔ “발굴을 부서에 요청해도 업무 과중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음. 결국 규제 담당이 발굴해서 역으로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
- ➔ 업무 담당은 규제개선을 위한 자료 작성과 보고의 업무가 더해져 더욱 발굴을 꺼림

#### 접수·발굴된 규제 개선 필요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 “관련 분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규제담당자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 “타 부서에 해당되는 규제 개선 권고는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이해하기 쉽지 않음”
- ➔ “관련 부서 직원의 서류 작성의 피로도가 많아 부서에 대한 지속적 독려에 어려움 있음”

#### 규제개혁 관련 정부합동평가 등 관리

- ➔ 1명의 담당자가 맡고 있는 규제 관련 합동평가지표가 많아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 “일선에서는 규제 관련 사항은 대부분 일반 민원에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에 실적을 요구하고 있음
- ➔ “중앙부처의 중점과제 채택이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받음”
- ➔ “규제개혁신문고로 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중앙 담당자들이 ‘이게 무슨 규제냐’ 하는 투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음”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1) 자치구 규제 담당 공무원

- '외부 기관의 자치구 소관 규제 개선 권고 대응'과 '규제개혁 관련 정부합동평가 등 관리'가 현재 가장 추진이 원활하다고 인식됨
- 반면 현재 원활하지는 않지만 '서울시' 및 '중앙정부' 소관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됨

### ⇒ 현재 업무 추진이 원활한 정도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 현재 업무 추진이 원활한 정도 — 더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 (단위: %)



외부 기관의 자치구 소관 규제 개선 권고 대응    규제개혁 관련 정부합동평가 등 관리    자치구 소관 등록규제 정비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자치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접수·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의 개선 필요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서울시 소관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자치구 소관 규제 개선 성과 평가    중앙정부 소관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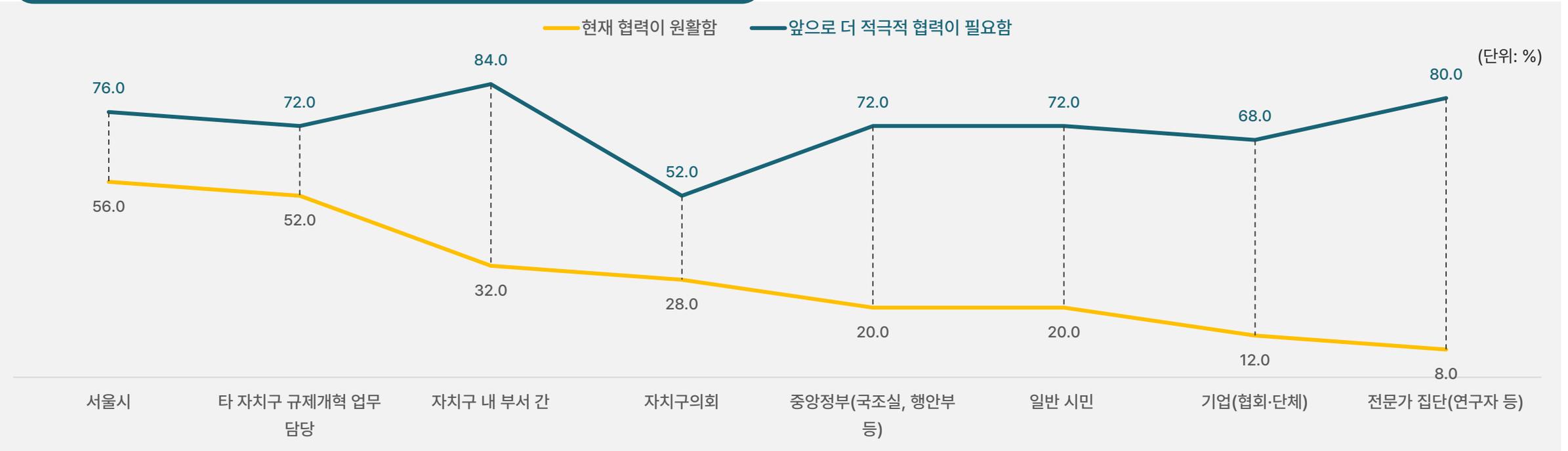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1) 자치구 규제 담당 공무원

- 앞으로 '자치구 내 부서 간'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
- 반면 현재 원활하지는 않지만 '전문가 집단' 및 '기업(협회단체)'와의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됨

### ↻ 현재 협력이 원활한 정도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성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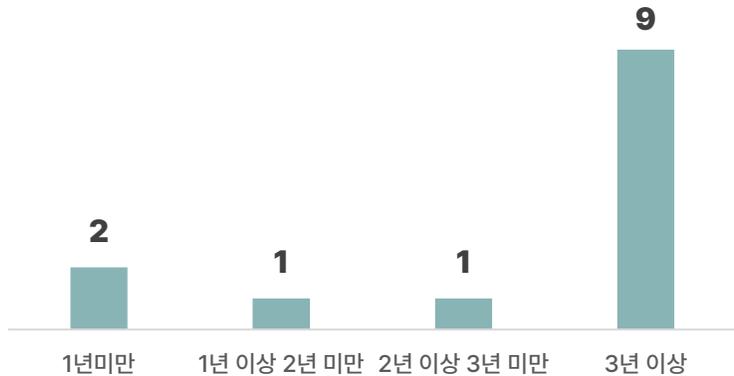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2) 기업 및 기업지원조직 규제 업무 담당자

- 기업, 기업 협·단체, 기업지원조직에서 규제개혁 업무 담당한 13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
- 규제 업무 담당자의 업무 중 **규제애로 접수 또는 발굴 업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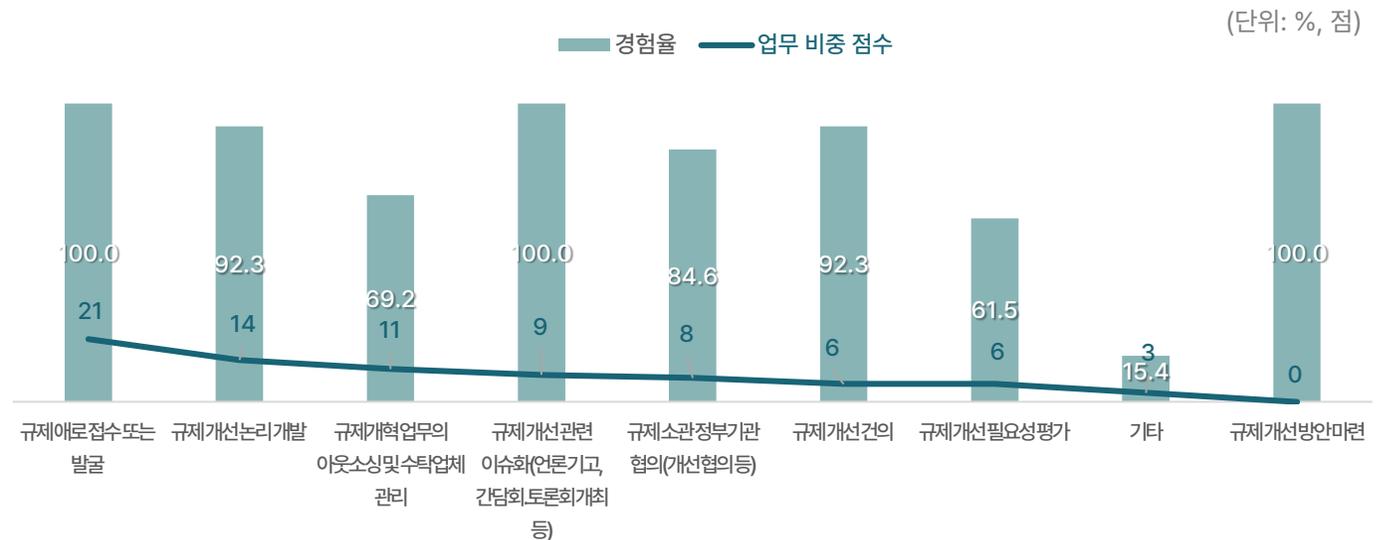
### ⑤ 기업 및 기업지원조직 규제업무 담당자

- 소속기관은 **기업 2, 민간협회단체 8, 지방공공기관 4**
- 소속 기관 내 규제개혁 업무 담당 인력은 평균 **4.1명**
- 규제개혁 업무 담당 기간은 **'3년 이상'**이 9명으로 가장 많음



### ⑤ 규제 업무 수행 경험과 업무별 비중

- **규제애로 접수 또는 발굴, 규제개선방안 마련, 규제개선 관련 이슈화**의 경험율이 각각 100%로 가장 높음
- 업무 비중은 **규제애로 접수 또는 발굴**이 가장 크고, **규제개선 논리개발**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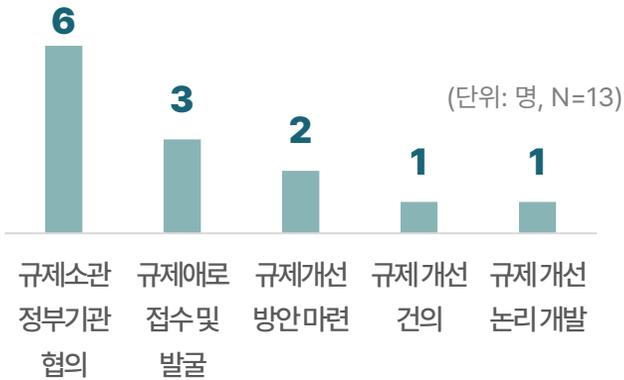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2) 기업 및 기업지원조직 규제 업무 담당자

- 담당 공무원 무관심이나 갈등·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태도 등으로 인해 **규제 소관 정부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가장 어렵다고 인식**
- 기업이 규제를 잘 알지 못하고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 해소하려는 의지 부족해 **규제애로 접수 및 발굴도 어려움**

### 가장 어려운 업무와 그 이유



#### 1위

##### 규제소관 정부기관 협의

- ➔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과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 해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 회피”
- ➔ “기관·부처 간 해석 불일치와 권한 분절, 리스크 회피로 인한 보수적 결재, 규제 과제 접수 창구 다중과 처리기한 관리의 불투명성, 담당자 순환(결정적임), 과제 이해를 위한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협의가 쉽게 장기화되기 때문임.”
- ➔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고위급의 (규제철폐) 입장이 체감되기 어렵고, 또 다른 일로서 취급되기 때문임”

#### 2위

##### 규제애로 접수 및 발굴

- ➔ “관련법을 잘 알고 자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신산업 기업은 소수이며, 규제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행정 민원성이거나 비즈니스 구체성이 없거나 투자 저해 우려 등으로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강함”
- ➔ “명확한 규제식별이 되더라도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의지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함”
- ➔ “규제개선에 대한 (기업의) 기대감이 적어 건의 포기”

#### 3위

##### 규제개선방안 마련

- ➔ “건의 당사자의 입장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개선방안을 만들려면 전문적인 검토와 정부부처와 상당기간 협의가 필요”
- ➔ “규제 개선 과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법령과 연계되어 있어, 독자적인 개선 방안 추진이 어려움”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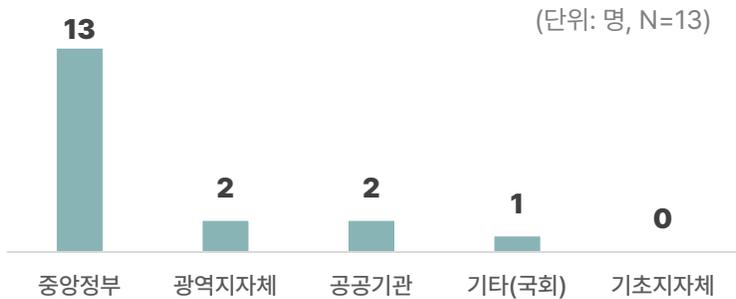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2) 기업 및 기업지원조직 규제 업무 담당자

- 주로 대응하는 규제 소관 기관으로 **중앙정부**, 대응하는 규제 유형으로 **중앙정부 법률**이 가장 많이 꼽힘
- 중복응답을 허용했음에도 **광역 지자체**를 주로 대응한다거나, **광역지자체 조례**를 대응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 주로 대응하는 규제 소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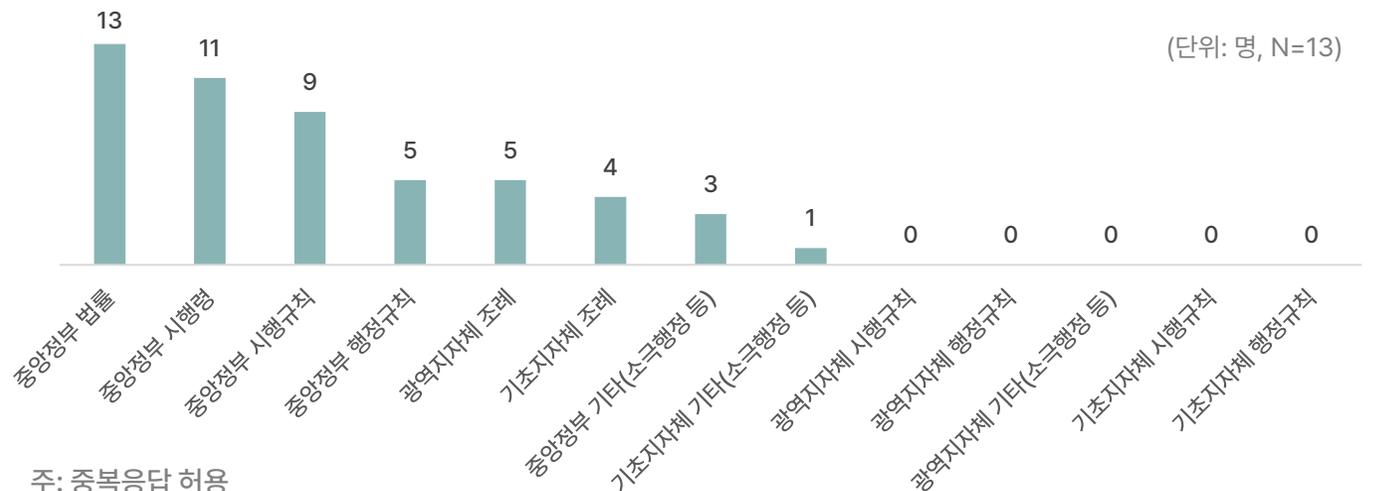
- 주로 대응하는 규제개선과제의 소관 기관을 질문한 결과, **중앙정부**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
- 광역지자체는 2명, 공공기관 2명, 기타(국회) 1명으로 집계됨



주: 중복응답 허용

### ➡ 주로 대응하는 규제의 유형

- 주로 대응하는 규제 유형으로 **중앙정부 법률**(13명)이 가장 많이 꼽히고 중앙정부 시행령이 그 뒤를 이음
- 광역지자체 조례를 꼽은 경우는 5명, 기초지자체 조례를 꼽은 경우는 4명에 그침



주: 중복응답 허용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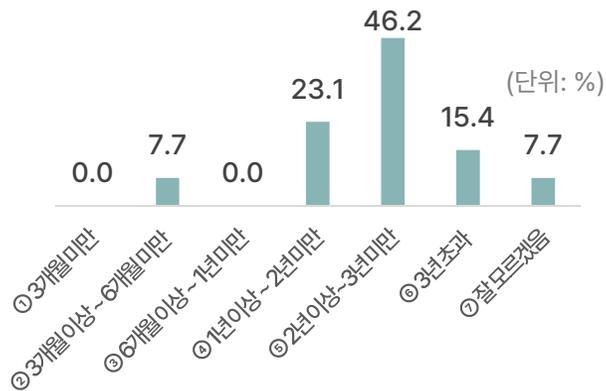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2) 기업 및 기업지원조직 규제 업무 담당자

- 규제 해소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 이상~3년 미만이라는 응답 가장 많음
- 규제개선 시 주로 기업 협·단체 규제어로접수센터에 접수한다는 응답 가장 많고 규제 소관 기관에 직접 건의하거나 여론 형성 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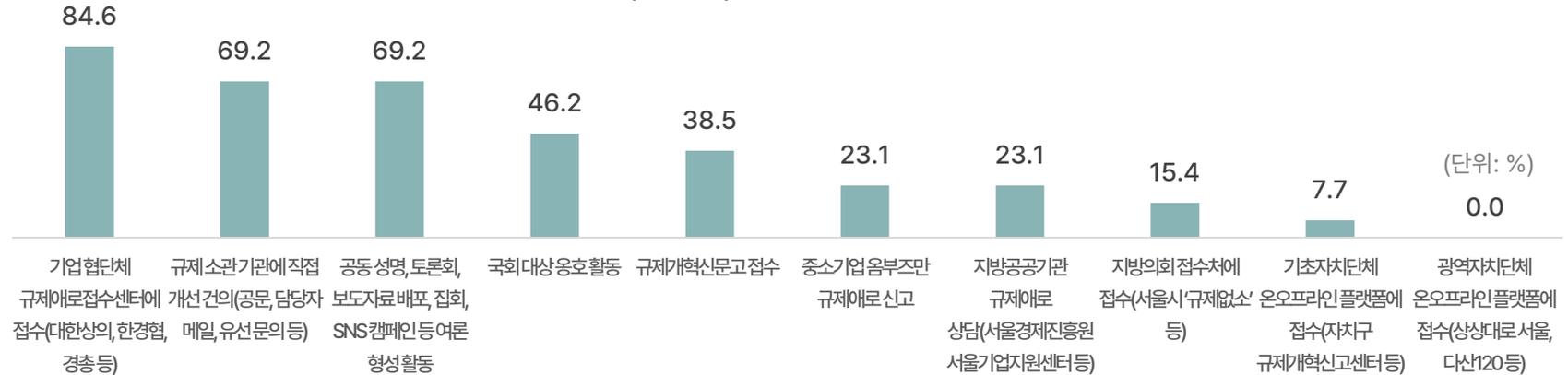
### 규제 해소에 걸리는 시간

- 규제 해소에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을 질문한 결과 '2년 이상~3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6.2%로 가장 높음



### 규제개선 시 주로 활용하는 방법

- 대한상의, 한경협, 경총 등 기업 협·단체 규제어로접수센터에 접수한다는 응답이 84.6%로 가장 높음
- 규제 소관 기관에 직접 개선 건의한다는 응답(69.2%)이 그 뒤를 이음



주: '다소 활용한다'와 '자주 활용한다'는 응답률을 합산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2) 기업 및 기업지원조직 규제 업무 담당자

- 단건 제안보다는 다양한 규제를 묶어 개선 추진하는 것이 이슈 파이팅에 수월하며, 집단 레버리지와 조정력 제고, 유사사례 DB 및 법무자문을 통한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 협·단체 규제애로센터에 주로 접수



### ⇒ 해당 규제 개선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

#### 기업 협·단체 규제애로센터에 접수

- ➔ “기업이 사업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단건으로 제안하기 보단 산업별, 기업규모별 등 다양한 규제를 묶어 큰 단위의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편이 이슈 파이팅을 하기에 더 수월한 면”
- ➔ “집단 레버리지와 조정력 때문. 대한상의·경총 등은 정부 상시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보유해 다부처 이견 조정과 의제 상향이 쉽고, 유사사례 DB·법무자문으로 근거 있는 안을 설계해 성공 가능성을 높임. 회원사 명의 비공개 등 완충장치로 보복 우려 낮추고, 공동성명·공청회 등 여론전 연계가 가능해 시간·비용 효율도 좋음”

#### 규제 소관 기관에 직접 개선 건의

- ➔ “규제 담당 기관 담당자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규제개선을 통한 효용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규제개선 과정을 가장 빠르게 진행 가능”
- ➔ “결정권과 가장 가까운 창구라 처리 책임·일정이 명확하고, 공식 기록으로 사후관리·선례화에 유리”
- ➔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고, 다른 채널을 쓰더라도 사용 사유와 시점을 즉시 공유해야 관계 마찰을 줄임”

#### 여론 형성 활동 (공동 성명, 토론회, 보도자료 배포 등)

- ➔ “규제소관기관 및 규제총괄부서의 즉각적 반응 유도 가능한 효과적 수단”
- ➔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
- ➔ “여론 형성 활동은 행정 협의가 멈췄거나 이용자에 대한 이익이 뚜렷한 사안을 사회적·정치적으로 의제 상향하기 위한 보조수단 (중략) 다만 정치화·관계비용·사실검증 리스크가 커 가급적 후순위로 신중히 쓰며, 착수 전 소관부처 담당자에게 취지·범위 및 병행 채널을 통지”

#### 국회 대상 옹호활동

- ➔ “국회의원을 통한 이슈 제기만큼 정부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음”
- ➔ “부처 간 이견이 장기화되거나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서 의제 상향 및 책임성 확보하기에 유효”
- ➔ “업계 공동현안의 여론 형성 및 이해관계 조정에도 강함”
- ➔ “국회는 입법기관이면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 필요한 규제개선에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큰 경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개정입법에 나설 수 있고 행정부의 전환을 세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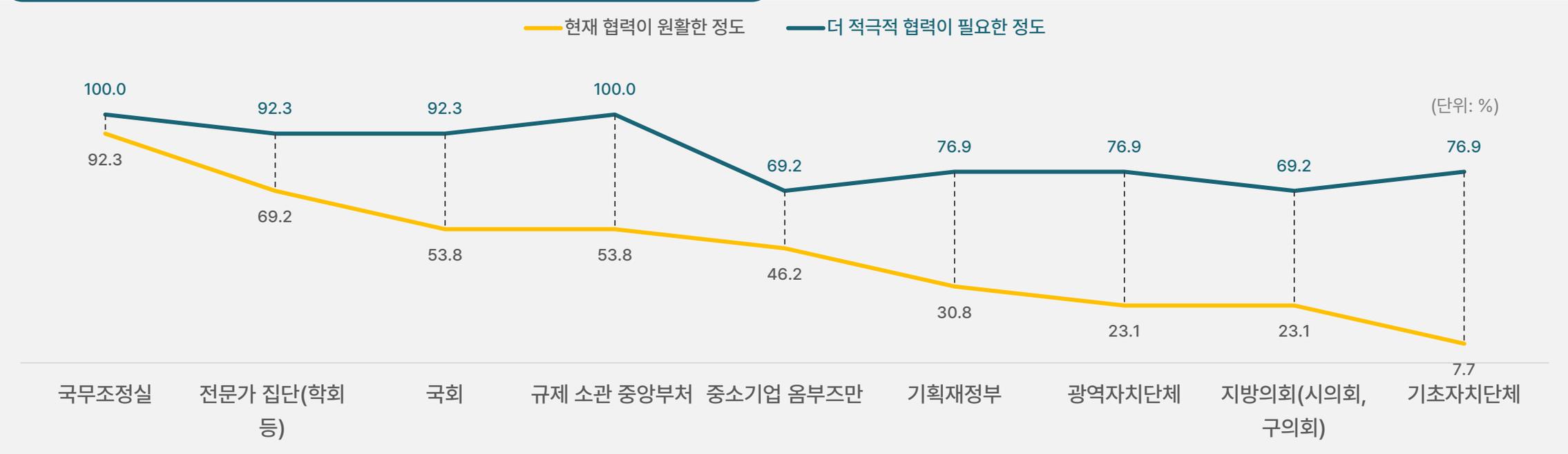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2) 기업 및 기업지원조직 규제 업무 담당자

- 더 적극적 협력이 이뤄질 필요를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대상은 **국무조정실과 규제 소관 중앙부처**
-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와는 현재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고** 인식하나 **앞으로 더 적극적 협력이 이뤄질 필요**를 크게 느낌

### ➡ 현재 협력이 원활한 정도와 더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정도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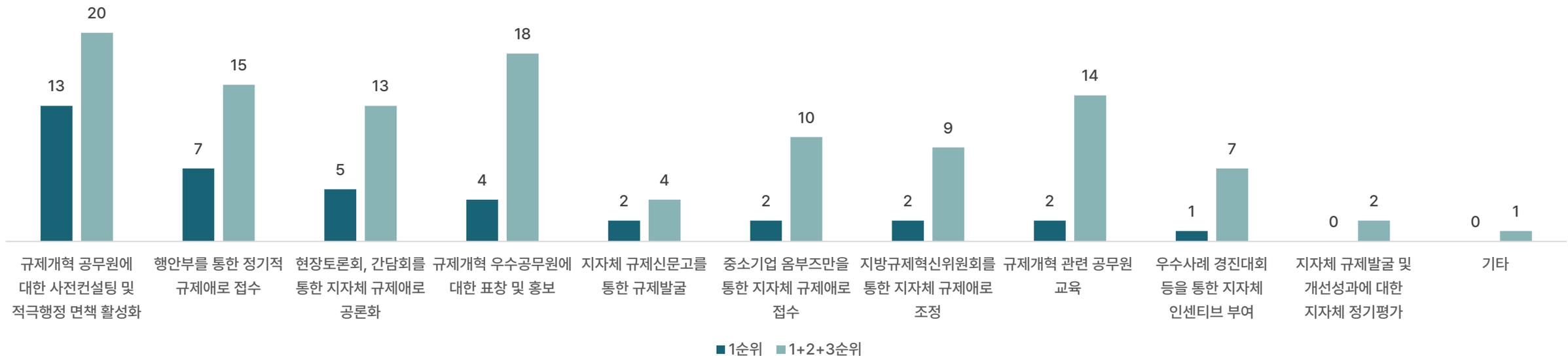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3) 자치구 공무원 및 (기업)지원조직 규제 업무 담당자

-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 정책으로 '규제개혁 공무원에 대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가 가장 많이 꼽힘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홍보'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됨

### ⇒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 정책

(단위: 명, N=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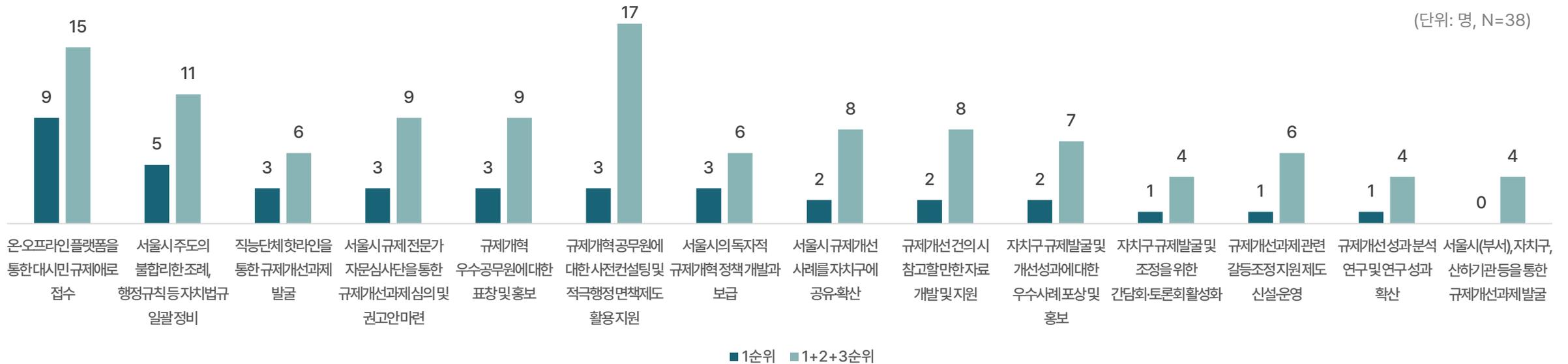
# 03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규제개혁 관계자 인식 분석 \_3) 자치구 공무원 및 (기업)지원조직 규제 업무 담당자

-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서울시 정책으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시민 규제어로 접수'가 가장 많이 꼽힘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면, 규제개혁 공무원에 대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됨

###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서울시 정책





## 해외 규제개혁 거버넌스 사례



규제발굴

- **싱가포르 PEP** : 규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규제개혁 전 과정에 걸쳐 실효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덴마크 기업규제포럼**: 규제 단순화 의제를 민간 기업 중심으로 상시 발굴

### 싱가포르 PEP (Pro-Enterprise Panel)

#### Pro-Enterprise Panel (PEP)



- **(개요)** PEP는 2000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산업통상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산하 민관협력체제
- **(목적)** 공무원과 기업 리더가 함께 참여하여 기업이 규제나 제도적 장애물을 접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함
- **(구성)** 의장은 고위공무원이 맡으며 현재 12인의 기업 리더가 패널로 참여
- **(운영방식)** 기업이 제안을 제출하면 피드백을 PEP가 접수하고, 관련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개선 권고
- **(제도)** PEP제안, 규제샌드박스(First mover Framework, New idea Scheme, Green Economy Regulatory Initiative)
- **(성과)** 2,000개 이상 제안 접수 1,000건 이상이 실제 규제나 제도에 반영

### 덴마크 기업규제포럼(Danish Business Regulation Forum)



- **(개요)** 규제 단순화 의제를 민간이 상시 발굴
- **(개선 목적)** 1. 기업규제의 행정부담 감소, 2. 규제준수비용 경감, 3. 규제변경에 따른 기업 재편성 및 적응비용 감소, 4. 신사업 모델 발전과 신기술 확산 지원, 5. 기업 중심 디지털 솔루션 개선 및 기관 간 연계 강화
- **(대상규제)** 1.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규제, 2. 추가 지출을 유발하는 규제, 3. 생산을 제한하는 규제
- **(구성)** 경제단체, 노동조합, 전문가, 기업 경영진이 상설 자문체에 참여
- **(운영방식)**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참여 가능, 모든 권고에 대해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특징)** 포럼이 권고한 규제개선안의 80% 이상 수용



## 해외 규제개혁 거버넌스 사례



분석·조정

- **영국 PA** : 기업이 특정 지자체를 대표 지자체(PA)로 지정하고 규제해석과 집행계획의 기준 조언을 받으면 다른 지자체도 존중하는 제도
- **프랑스 국가규범평가위원회** : 중앙정부 제정 하위 법령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지방대표 중심의 합의형 심의

### 영국 대표 지자체(Primary Authority)



- **(개요)**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지자체로 지정 · 규제해석과 집행계획의 기준조언(Assured Advice)을 받으면, 다른 지자체는 이를 존중 · 기업이 단일창구를 통해 확정된 자문을 받아 규제 불확실성 감소
- **(대상 분야)** 환경보건 · 식품 · 거래표준 · 소방안전 등 지역 집행형 규제 전반
- **(운영방식)** 중앙정부: 파트너십 지정 및 해제, 대표 지자체 등록시스템 운영
  - 대표 지자체: 사전통지 처리, 집행지휘 등
  - 일선 지자체: 규제미이행 벌금/시정명령 부과 시 대표 지자체에 사전통지 의무
  - 기업 및 업종단체: 대표 지자체 직접 선택(직접 파트너십) 또는 협회/프랜차이즈 본사 지정(협동형 파트너십)

### 프랑스 국가규범평가위원회(CNEN)



- **(개요)** 중앙정부 하위법령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의회, 지방 간의 합의형 상설 심의기구
- **(목적)**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하위법령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기술적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 (연간 최소 11번의 회의 진행)
- **(구성)** 지방대표 23, 의회 4, 국가 9(지방대표 중심) 참여. 의장 1, 부의장 3
- **(운영방식)** 사전 및 사후평가 가능, 규범감축 및 유연화 프로그램 운영
- **(특징)** 지방규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 규제부담의 60% 이상이 최근 10년간 제정된 기술규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2023년 CNEN 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 규범 총량 감축을 제도화해야 함을 권고

# 04 국내외 사례 검토



## 해외 규제개혁 거버넌스 사례

- 제도기반 마련 • 뉴질랜드 규제부 : 대국민 규제접수창구 운영, 중앙규제 설계 시 지자체 사전협업 및 참여 제도화
- 및 모니터링 • 캐나다의 규제비용보고서 : 규제모니터링에서 민간의 독립기업연합(CFIB)이 지방정부 규제개혁 경쟁 유도

### 뉴질랜드 규제부 (Ministry for Regulation)



To reduce minimum standards and red tape barriers to ECE services growing their businesses, and help the economy



- **(개요)** 2024년에 설립된 중앙부처로 규제 제정, 기존 규제 분석 및 간소화 추진
  - **(기능)** 신규 규제의 질 보장, 기존 규제체계의 기능 개선, 규제설계 및 운영 능력 제고, 규제관리체계의 지속적·영구적 개선
  - **(구성)** 91명의 상근직 직원 채용 계획
  - **(제도)** 국민이 규제 문제를 제보할 수 있는 Red Tape Tipline 개설하여 해결 추진, 섹터 규제 검토(sectoral review) 활성화
  - **(특징)** 부처의 다양한 협업 대상 명시: 다른 중앙 부처 및 규제기관, 감독·자문기구, 행정기구(총리실, 내각 위원회, 의회, 사법기구, 국제기구, 민간 피규제자 및 그들의 대표, 지방정부를 포함한 규제자 및 집행기구
- \*특히 중앙정부가 규제 설계 시 지자체 사전협업 및 참여를 위한 지침 마련

### 캐나다 규제비용보고서(Canada's Red Tape Report Card)

#### Provincial Red Tape Report Card



2025 Provincial Red Tape Report Card — areas of regulatory performance, score and grade<sup>1, 2</sup>

Jurisdiction	Regulatory Accountability (0-10)	Regulatory Burden (0-10)	Political priority (0-10)	Housing initiatives (0-10)	Overall Score and Grade
Alberta	8.9 A	9.3 A	10 A	10	9.4 A
Nova Scotia	8.8 A	8.1 B	10 A	10	8.9 A
Ontario	8.9 A	7.9 B	10 A	10	8.9 A
British Columbia	8.9 A	8.9 A	5.5 D	10	8.4 B+
Quebec	8.8 A	8.7 C	9.5 A	10	8.3 B+
Saskatchewan	8.0 B	8.0 B	6.0 C	0	7.6 B
Federal	6.6 C	7.0 C	6.5 C	10	7.0 C
Prince Edward Island	5.8 D	6.5 C	6.5 C	10	6.4 C
Manitoba	1.8 F	8.8 A	2.0 F	5	4.7 F
Newfoundland and Labrador	3.0 F	5.5 D	6.5 C	0	4.7 F
New Brunswick <sup>3</sup>	5.6 D	6.0 C	NA NA	5	NA NA

- **(개요)** 캐나다 독립기업연합(CFIB)이 규제비용 측정하고 각 주의 규제거버넌스 성숙도를 등급화하여 경쟁 유도
- **(평가항목)** 규제책임성, 규제부담, 정치적 우선순위 등
- **(특징)** 민간의 역할: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피드백, 정책제안 등을 통해 규제부담, 절차적 문제, 행정처리의 비효율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공론화 역할을 하며, 성과평가 및 등급공개를 통해 정부압박 및 견인역할을 수행함. 보고서 성적이 낮은 주정부에 대해 구체적 개선을 요구하며, 정책적 변화를 유도. 정부의 자기평가를 감시하고 민간체감과의 격차를 보여줌으로써 독립적 외부감시

#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시범운영 개요

시 자체규제  
효과적 발굴  
및 개선 위해  
민관 주체 간  
협력 필요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1)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추진 관련  
민간전문가, 자치구,  
시 공공기관 간 협력

시범 운영  
성과 공유

### 제1차 규제혁신포럼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추진  
경과공유 및 향후 과제 도출  
(25. 5. 7.)

- 심의안건 검토한 외부규제전문가 참여

-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관련 기관 관계자, 연구자, 실무진 등 참여

### 제3차 규제혁신포럼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 방안 연구 성과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  
(25. 11월 말 예정)

종합

중앙규제  
개선 과제  
공동 대응 위해  
시도 간  
협력 필요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2)  
지방규제현안 공동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을 위한 연구협력

시범 운영  
성과 공유

### 제2차 규제혁신포럼

지방규제현안 발굴 성과 공유 및  
중앙규제권한 이양 방안 논의  
(25. 10. 29.)

- 대한민국 시도연구원의 협의회 연구기관, 지방정부 협의체 관계자 참여



#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1)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추진 사례

-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위해 **규제철폐 100일** 집중 운영 : 2025. 1. 3. ~ 2025. 4. 12.
- 민간 중심의 규제철폐를 위해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운영
  - 규제개선과제 **발굴의 다각화**를 위해 **자치구, 시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 규제개선과제 검토 및 해소 단계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2,479건

### 규제 집중 발굴

(시민 + 직원)

- 시민: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 (947건)
- 기초살: 숨어있는 규제 조사 (177건)
- 전 공무원: 창의 제안 접수 (753건)
- 전 기관: 분야별 TF, 자치구, 사업소, 투출기관, 위원회 등 발굴(602건)



### 제안 분류 · 구체화

(서울연구원)

- 접수된 안건 원자료를 단순민원, 규제 관련 제안으로 분류
- **심의회 상정 후보 안건** 관련 의견수렴-전문가심의회위원, 외부 전문가(10인) 대상
- 상정 안건 **전문가 검토** 요청
-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안건 상정

157건

### 권고안 마련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 주1회 심의회 개최(총 10회)
- 파급력이 크고 쟁점이 있는 **핵심안건**은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
  - 일반안건은 서면 검토
  - 시 자체 해소 안건 보고 청취
- 상정 안건의 규제철폐 필요성, 타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권고안 마련**

123건

### 규제철폐 결정

(시장+심의회)

- 시장이 주재하고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위원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 개최(총 1회, 4월)
- 규제철폐안 최종 결정 (총 123건)

#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1)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추진 사례

### 분야별 대표 규제 철폐 사례



교통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적용 (성인 → 청소년 + 성인)
- 장애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절차 폐지
-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
- 마을버스 최대이용가능 시간 완화 (1시간 → 2시간)



기업  
소상  
공인

- 가락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 (현금 → 보증보험)
- 마곡 지식산업센터 임대 상한 면적(1社, 120m<sup>2</sup>이하) 폐지
-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공원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 허용)
-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대상 확대
- 소상공인을 위한 입간판 재료 규제 완화 (비철금속 → 금속 등)



복지  
일반  
행정

-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 매력 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40~65세 → 40세 이상)
- 초등 긴급 일시 돌봄 제공 시설 선정 조건 폐지
-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 (AI업 구독료 결제 허용)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3~5세 → 0~5세)
-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 (기준 모호 → 사유 명확화)
-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 (비거주 생활인구도 키즈카페 이용)



주택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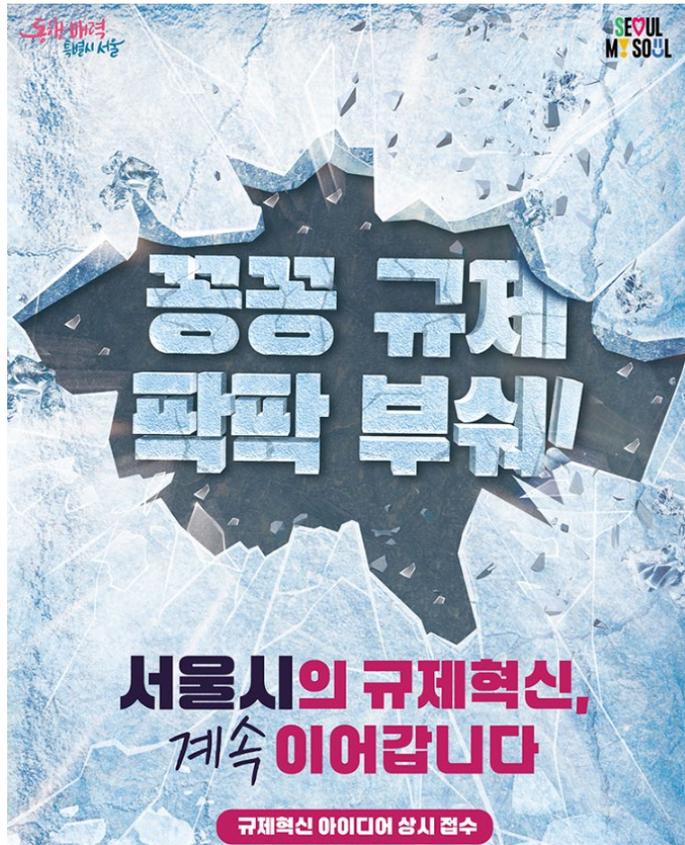
-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폐지
- 입체공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정비사업 관련 입체공원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

#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1)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추진 사례

규제철폐 100일 이후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상시 가동 및 제도 강화



구분	전략	주요 내용
규제발굴	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규제발굴단 운영</li> <li>• 응답소, 120등 민원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li> <li>• 직능단체 핫라인 개설 및 분야별 정기 간담회</li> <li>• 시 등록규제 네거티브 규제 전환</li> <li>• 건축, 인허가 등 주요지침내 규제 집중발굴 등</li> </ul>
선정 및 심사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규제 선정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구체화 및 권고안 마련</li> <li>•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li> <li>• 규제안건 TF 구성,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li> </ul>
사후 관리, 공감대 확산	체계적 규제 관리 및 성과평가,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관리 시스템 구축</li> <li>• 전문가 규제 성과분석 추진</li> <li>• 규제혁신 포럼, 공모전 등 규제혁신 논의의장 마련</li> <li>• 직원 규제인식 전환 교육 등</li> </ul>
제도 정비	규제 혁신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혁신 조례 재정비(규제혁신 기본조례 마련)</li> <li>•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신설</li> <li>• 규제 심사기준-매뉴얼-체크리스트 마련 등</li> </ul>
유관기관 협력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시의회 협력 강화</li> <li>• 시·자치구 규제발굴 협의체 구축</li> <li>• 타시도 공동과제 발굴·건의 등</li> </ul>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1)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추진 사례

실효적 지방규제혁신 위해서는 **전략 마련, 협력체계 구축, 제도화, 권한 이양** 필요

리더십 지원 · 내부자원의 효과적  
동원 · 민관협력 통해  
빠르게 양적 성과 거둔 측면



- ☑ 시장 신년사, 시장 주재 회의 개최 등 통해 리더십의 관심과 지원 지속한 것이 주요한 규제철폐 추진의 동력
- ☑ 기획조정실 주도로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등이 내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하게 안건 발굴 · 개선
- ☑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 권고안 마련하고, 외부 연구기관 중심으로 안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시각과 전문성이 효과적으로 반영

방향성(전략) · 현장성 · 효과성 ·  
지속가능성 확보는 과제



- ☑ 뚜렷한 전략 없이 단기에 집중적으로 규제철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 직원 제안에 치중, 시민 · 기업 등 현장의 규제애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는 한계 노정
- ☑ 규제철폐 안건의 효과적 해소 위한 내 · 외부 협력체계 미흡하며, 지방정부 권한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제는 개선 파급력도 제한적
- ☑ 발굴-개선-사후관리 등 규제개혁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관리 부족

### [ 시사점 ]

상당한 자원 투입됐지만 규제개혁의 질적 우수성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 ① 전략 마련, 협력체계 구축, 제도화 필요성 확인
- ② 지방권한 내 실효적 규제개혁의 가능성도 고민

#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2) 지방규제현안 공동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을 위한 연구 협력 사례

### 🎯 공동연구의 목적과 내용

- ▶ 이 연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현장·주민 맞춤형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발굴·공유하며,
- ▶ 공통현안 또는 자치분권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만한 핵심현안을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및 효과적인 이양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대한민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기관의 공동연구로 진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발굴과 개선 건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추진배경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규제권한으로 지방정부가 현장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규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규제권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양을 추진함으로써 더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연구명 지방규제혁신 및 중앙규제 권한 이양 방안

➔ 연구기간 2025. 6. 1. ~ 2025. 12. 31. (7개월)

➔ 연구진 17개 기관 소속 연구진 19명 (연구책임: 임현정)

고승희(충남연구원), 김광석(대구정책연구원), 김명상(제주연구원), 민현정(광주연구원), 박근우(경북연구원), 박철민(경남연구원), 박충훈(부산연구원), 변성수(대전세종연구원), 변혜선(충북연구원), 안성조(경북연구원), 오승규(한국지방세연구원), 이병현(전남연구원), 이은규(울산연구원), 이정용(인천연구원), 이종현(인천연구원), 임현정(서울연구원), 정기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천지은(전북연구원), 최익창(강원연구원)

#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2) 지방규제현안 공동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을 위한 연구 협력 사례

15개 시도연구원 평균 6.7개 규제개선과제 발굴

인천(14건) > 충북(9건) > 충남·전남·경북(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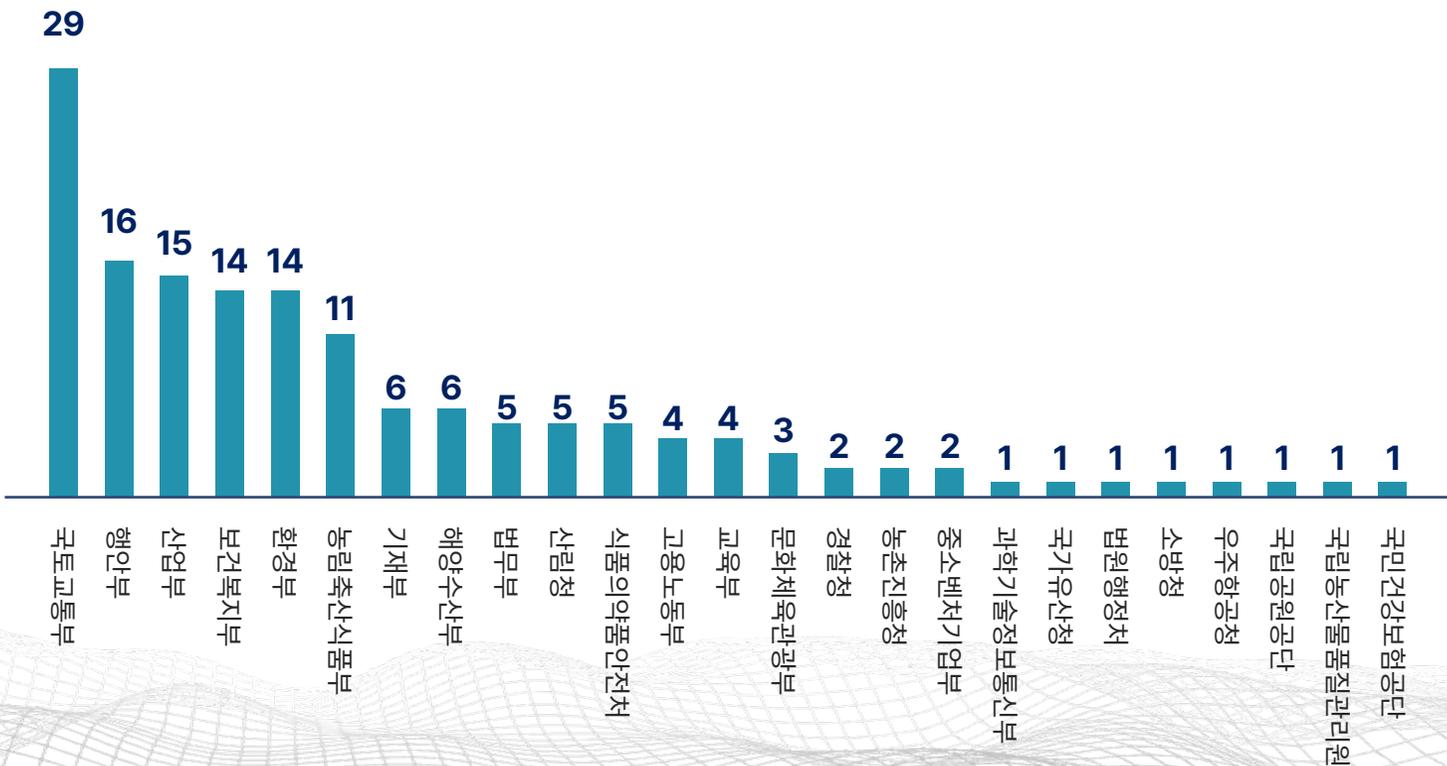
발굴된 안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151건) 중 국토교통부 비중 가장 큼

국토교통부(29건) > 행안부(16건) > 산업부(15건)

지역별 규제개선과제 발굴 현황 (단위 : 건)



발굴 과제의 소관 부처별 현황 (단위 : 건)



#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2) 지방규제현안 공동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을 위한 연구 협력 사례

### 전국 공통 현안



####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및 관련 지자체 권한 강화

- 대전**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 울산**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해제권한 시·도지사 이양)
- 인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전,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입지허용
- 대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해제 결정권한 이양,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제 총량 예외 인정



#### 초고령사회 대응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규제 개선

- 서울** 도심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 인천** 대리처방 가능한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포함)
- 전북** 의료취약지역 시니어 닥터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학연금법 개정,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
- 충북** 특수의료장비(MRI) 설치인정기준 완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MRI 판독 허용)



####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 대전**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 연료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 광주** 수소충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설치 규제 완화
- 인천**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전력거래기준 완화
- 울산**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완화 (산업용 전기 전환, 수익 개선)
- 전남** 해상풍력 외부망 REC 가중치 산정 기준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
- 충남**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기준 개선, 신태양광 보급 확산을 통한 RE100 달성



####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

- 경남** 외국인 산업인력 쿼터 제한 완화
- 광주**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활용 규제
- 전남**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E-8) 제도에 천일염 분야 추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간소화

- 대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간소화
- 경북** BF 인증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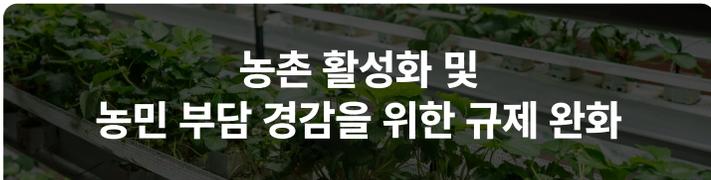
#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2) 지방규제현안 공동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을 위한 연구 협력 사례

### 권역 또는 지역 특성에 따른 공통 현안

#### 농촌



- 강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 확대(해제기준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전용 규제 완화
- 경북** 입업후계자 요건(연령) 완화
- 경남** 농지 소유·거래 규제 완화(심의 대상 축소 등)
- 충남** 지역소멸 대응 및 농촌·농업 구조개혁을 위한 공공 스마트팜 부지확보 근거 마련
- 인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 충북** 유기농·무농약 인증결과와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중복검사 절차 개선, 도축·집유장 연 1회 이상 별도 검사 의무 조항 삭제

#### 어촌·섬



- 인천**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국유지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양여 허용하여 국유지 활용 애로 해소
- 전남** 해상풍력 외부망 REC 가중치 산정 기준 개선, 소규모 섬 지역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 기준 완화, 섬 지역 최종 매립 폐기물의 육지 반출 허가(현재 재활용 목적 외에는 기매립 폐기물 굴착·반출이 불가하여 매립용량 부족 문제 심화), 수산부산물 활용 규제 개선
- 제주** 크루즈 출국 보안검색 제도개선

#### 수도권



- 서울**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하향
- 인천** 접경지역에 대한 중첩규제 완화(수도권 적용 예외),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개선

# 05 서울형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범운영 사례



## 2) 지방규제현안 공동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을 위한 연구 협력 사례

### 공동 발굴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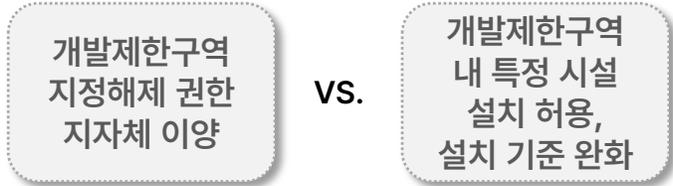
#### 공동 건의 추진 가능한 과제 상당

- ➔ 개발제한구역 규제, 건축 규제, 농지 규제 등 전국의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적 규제 애로 호소
- ➔ 농어촌, 수도권, 인구소멸지역 등 특정 지역별로 공동 추진이 가능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가능성 확인



#### 개선방안에 관한 공동논의·분석 필요

- ➔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공동 논의 또는 분석의 필요성 확인
- ➔ 예)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향



#### 다양한 발굴 방법 공유 및 효과성 논의 필요

- ➔ 발굴 방법 공유, 효과성·한계 논의 통한 상호 학습 필요성 확인
  - 활용된 발굴 방법: 언론기사·연구자료 검토, 기업인·공무원·지방의원 간담회, 지자체 내 공무원 TF, 워킹 그룹,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 지자체 현안 대응 회의 과정에서 발굴, 현장 민원실 의견 수렴, 통계자료 분석, 민원포털 이용자 의견 반영, 정책협의회 논의결과 반영, 법령분석, 중앙-지방간 규제협의회 안건 참고, 규제개선 과제 전문가 토론회 등

#### 개선 건의 우수 사례 자료 구축·공유 필요

- ➔ 지방정부 협조 정도, 관련 선행연구 존재 여부, 정례적인 발굴채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개선 건의 양식과 내용 구성상의 차이 크게 나타남
- ➔ 효과적 규제개선·권한 이양 추진 위해 공통으로 참고할 만한 수범사례의 발굴·공유 필요

# 06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 방안



## 서울시 규제개혁 추진단계별 거버넌스 강화 방안



### 문제점

- 규제 발굴**
  - 서울시 규제개혁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적 발굴 미흡
  - 시, 구, 공공기관의 발굴 유인 미흡 및 노하우 부족
  - 시·구의회 참여 부족
- 규제 검토**
  - 핵심과제 선정 기준 부재
  - 규제검토의 전문성 부족
  - 규제검토 과정에서 일반시민, 피규제자, 기업지원조직 참여 부족
- 규제 해소**
  - 중앙규제의 낮은 수용률
  - 자체규제의 경우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부서 협력 미흡
  - 이해관계 조정 미흡
  - 국회, 지방의회와의 협력 미흡
- 규제 개선·환류**
  - 수용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등 규제 개선 사후관리 과정 미비
  - 개선 과제의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과정 미비



### 개선방안

- 규제 발굴**
  - 시 규제혁신 전략에 맞는 하향식 기획·발굴 병행
  - 공무원 유인 마련 및 지원 강화
    -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 직원 보호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
    - 직원 보상 강화 우수 사례집 발간
    - 시 전문관제도 활용하여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근속 장려
  - 시·구의회 접수 기능 및 건의자료 연계 강화
- 규제 검토**
  - 핵심과제 선정 기준 마련
  - 규제검토의 전문성 제고
    - 핵심과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해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집중 도출
    - 중앙규제의 경우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원기관과의 협력적 검토
  - 규제검토의 참여도 제고
    - 과제 선정,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민간참여 제도화
- 규제 해소**
  - 중앙규제 수용률 제고
    - 미수용 과제 DB화 및 정기 재검토
    - 4대 지방정부협의회, 국회, 지방의회와 이슈화 관련 협력 강화
    - 중앙지방협력회의, 비상경제 장관회의 등에서 지방의 규제개선 건의 안건 상정 근거 및 절차 마련
  - 자체규제 해소 효과성 제고
    - 규제총괄위 권고에도 부서 불수용 안건은 시장 주재 규제위에서 재논의
  - 규제개선+갈등관리 통합추진
    - 갈등관리 통한 규제개선 시범사례 운용 및 제도화
- 규제 개선·환류**
  - 서울시 규제개혁 백서 정기 발간
  - 규제개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및 자치구, 시 공공기관 규제도 통합관리(장기과제)
  - 서울시 사전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및 사후규제향분석 도입
  - 대시민, 피규제자대상 홍보 강화(뉴스레터) 및 포럼 정기 개최 통한 성과 공유·확산

- 김건위·이병기. (2019).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신·이혁우, (2016). 「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서재호.(20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다층적 규제개혁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4): 233-259
- 이민창. (2017).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관한 고찰: 규제개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1), 271-298.
- 이종한·김신·이정욱·유종선·고동수·윤광진. (2009).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전대욱·김필·양원탁·김해솔. (2024). 「지방규제혁신 전략 방안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최대용·이혁우. (2014). 해외 주요국의 규제개혁 거버넌스 연구: 영국, 독일, 호주, 「거버넌스 사례연구」, 97-217.
- Canada's Red Tape Report 7th edition(2024), CFIB
- OECD, 2014, Framework for Regulatory Policy Evaluation
- Levi-Faur, D. (2011). Regulation and regulatory governance. Handbook on the Politics of Regulation, 1(1): 1-25
- 국가법령정보센터([www.go.kr](http://www.go.kr))
- 싱가포르 PEP 홈페이지(<https://www.mti.gov.sg/PEP>)
- 덴마크 기업규제포럼(<https://regelforum.dk/>, <https://www.em.dk/>)
- 미국사전지방협의(<https://www.transportation.gov/>)
- 영국 대표지자체(<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imary-authority-overview>)
- 뉴질랜드 규제부([www.regulation.govt.nz](http://www.regulation.govt.nz))

# 감사합니다

